

## ‘국산 주식 장려 운동’, 번지수가 틀렸다

광화문·뷰

김 신 영  
경제부 차장

초등학교 시절인 1980년대 등굣길에 선생님은 신발 검사를 했다. ‘국산품 애용’을 강제하던 때다. 외제 운동화 신으면 훈줄이 났다.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 국산품 사용의 명분은 외제 줄이기였다. 최근 고환율이 지속되자 정부가 개인투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줄 테니 ‘외제’ 주식을 팔라고 설득하고 나섰다. 오래전 국산품 애용운동 생각이 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주식이 끌어서 투자한다니 걱정”이라 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주변의 많은 개인투자자는 이성적으로 판단해 미국 주식을 산다. 투자 경험이 꽤 쌓인 데다 정확한 기업 정보를 접하고 충분히 학습할 길이 열려 있는 덕이다.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를 물으면 “사고 싶은 종목이 한국보다 훨씬 많다”고 입을 모운다. 앞날이 기대되는 회사가 미국에 특히 많다는 얘기다.

미국 시가총액 1~10위 명단을 2005년과 비교해 보니 MS 하나 남고 싹 바뀌었다. 10년 전까지 200등에도 못 들던 회사 엔비디아가 AI 열풍을 타고 1등에 등극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야말로 ‘쿨’하다. 반면 한국은 새 ‘스타 기업’이 참

안 나온다. 삼성·SK·현대차 등 대기업 계열사로 이어지는 상위권 종목이 20년 넘도록 대부분 그대로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벤처 창업자 중엔 ‘기업 가치를 따 3000억원까지만 키우고 싶다’는 이가 적지 않다”고 했다. 회사가 너무 크면 피곤해질 일만 남기 때문에 라이다. 실제로 한국에선 기업 규모가 불어날수록 사업하기가 고단해진다. 한 은 “회사가 ‘중소’에서 ‘중견’ 기업으로 전환되면 126개 규제를 추가로 적용 받는 탓에 한국 기업 사이엔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하다”고

고환율 대책이 “미국 주식 팔라” 기세 좋은 미 투자는 이성적 판단 정부가 한국 시장 매력 올려주면 합리적 투자자는 알아서 돌아온다

최근 진단했다. 기업 스스로가 성장하기 꺼는데 그 주식을 살 수는 없다.

미국 기업이 기세 좋게 뻗어갈 때 한국 기업은 수많은 규제를 습득하고 지키느라 힘을 빼야 한다. 선거 때마다 ‘표’ 되는 이권·시민 단체, 노조 눈치 보느라 규제 위에 규제를 더해온 결과다. 말하기도 피곤하지만 승차 공유는 아예 사업이 원천 봉쇄됐다. 미국·중국에선 ‘로보 택시’가 돌아다니는데 정부는 이제야 자율주행을 위한 임시 운행 제한 구역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 사이 테슬라가 한미 FTA로 규제가 느

슨한 ‘미국산’ 자동차를 활용해 고도의 자율 주행 시스템을 한국에 풀어버렸다. 세계 최대 스포츠 앤이 ‘스트리비’는 올해 한국에서 철수하며 “개인 정보 규제 등에 대응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유를 밝혔다. 주 45일 근무제까지 도입하려는 나라에서 테슬라 같은 기업이 나오길 기대한다면 과욕이다.

정부는 ‘서학 개미 귀환책’ 보도자료에 올해 코스피가 72% 올라 미국 상승률을 앞선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그러나 1년만 보지 않는다. 지난 10년 S&P500 지수 상승률은 240%, 코스피는 올해 그나마 올라 110%. 미국 주식 샀다고 손가락질할 이유는 없다. 미국에 투자해 수익이 많이 났다면 국가 전체로는 달리를 번 셈이니 좋은 일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새 비교세 통장을 출시하며 대상에 미국 주식까지 포함했다. 구호는 “글로벌 성장 동력을 일본 국민 자산 형성으로”였다. 한국 투자자 마음도 비슷하다.

외국 화장품을 좋아하던 소비자들은 값싸고 좋은 한국 제품이 많이 나오자 자연스레 국산을 더 사들이고 있다.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이 좋다고 판단하면 알아서 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환율 잡겠다며 미국 주식 팔라고 호소하기 전에 경제가 더 성장할 편을 깔고 규제로 막힌 기업의 생산성을 옮겨줄 방법부터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경제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설마 모르면, 더 문제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613]

### 왕과 城의 아이러니

‘집자는 숲속의 공주’부터 ‘겨울왕국’의 엘사까지 수많은 디즈니 공주의 성(城)은 독일 바이에른주의 노이슈반슈타인성을 모태로 만들어졌다. 험난한 알프스 협곡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솟아오른 백색 침탑은 과연 마법에 걸린 공주를 영원히 숨겨둘 것 같은 환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이 성은 동화 속 공주를 위해 지어진 게 아니라, 동화 속에 살고 싶던 왕자의 작품이다.

성을 지은 루트비히 2세는 1864년, 열아홉 나이에 바이에른 왕국의 국왕으로 즉위했다. 그러나 독일 지역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되면서 바이에른은 자율성을 잃고 왕의 지위 또한 상징적인 수준으로 축소됐다. 루트비히 2세가 중세 기사의 전설을 주제로 한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과 ‘탄호이



노이슈반슈타인성(城), 건축 기간 1869~1886년, 독일 바이에른주 소재.

저’에 걸잡을 수 없이 매료된 건 필연이었다. 백조가 끄는 배를 타고 나타나 공주를 구하는 신비로운 기사 로엔그린은 자기 정체를 밝혀야 하는 순간에 멀리 떠나야 했다. 죄를 뉘우쳤지만, 오직 죽은 다음에서야 구원을 받은 기사 탄호이저의 절망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속수무책으로 사라져 가는 바이에른 왕국을 위한 애가(哀歌)와도 같았을 것이다.

루트비히 2세는 수도 뮌헨을 벗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슈방가우의 ‘백조의 호수’ 옆에 바그너식 중세 기사의 성을 짓기 시작했다. 노이슈반슈타인은 전쟁을 위한 성벽이 아닌, 전설 속 기사의 낭만을 꿈꾸기만 하는 국왕은 죄인이나 다름없었다.

디자인을 맡은 사람은 바그너 오페라의 무대 디자이너였고, 건축가의 진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이재명 독재정권 7개월

## 《중공식 전체주의 망령》쓰나미 … 숨 막힌다! 《8대 악법》

뉴데일리  
newdaily.co.kr

사법 파괴 5대 악법 +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 기업-국민연금 협박, 환율 방어 강제 동원 | 휴대전화 개설 안면인식 의무화도 중공 스타일

### 한순간에 무너진다

며칠 후면 이재명 정권 출범 2년 차다. 지난 7개월간 대한 민국은 완전 달라졌다. 이루려면 오래 걸리지만, 무너뜨리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이재명 독재 정권의 폭주 비판에 등장하는 표현이 《전체주의》, 특히 《중공(중국공산당)식 전체주의》라는 말이 부쩍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비판, “민주당이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8대 악법》은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사법부를 장악하며, 정권의 직속 수사기관을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체제 구축법》이다.”

《사법 파괴 5대 악법》은, ① 《내란죄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② 판검사가 법 해석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 한다는 《법왜곡죄 신설법》③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④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4심제 도입법》⑤ 공수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은, ①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② 언론사·유튜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③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장동혁 대표의 현정 사상 최장 24시간 필리버스터라는 초인적 투혼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됐다. 《초유의 빅 브라더식 입틀막법》인 《정보통신망법 개



◀ 조여온다. 숨막힌다. 8대 악법이 자유를 억압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중공식 디지털 전체주의가 짓밟고 있다. ◎ 챗GPT

정안》도 통과됐다. 필리버스터 무력화 《국회법 개정안》,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법왜곡죄 법안》 등 나머지 악법들과, 국민 세금을 낭비하며 노골적 편향 수사를 자행해온 3대 특검의 뒤를 잇는 《차 종합 특검법》도 곧 처리된다.

정권 출범 전부터 이어져온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간신히 막았지만, 이제는 어떤 제동장치도 없다. 폭주다.

조지 오웰 소설 《1984》 조전혁 광운대 석좌교수의 질타. “현법 존중 정부 혁신TF는 《블랙리스트 / 비협조 공무원 적어내기 TF》이다. 공무원 휴대전화 들여다보는 게 헌법 존중? 조지 오웰(1984)에 나오는 《사랑부 Ministry of Love》가 떠오른다.”

조지 파 험프리스포트로 사설에서 소위 《혐오 표현 처벌 및 허위 조작 정보 규제법》에 대해 “자유사회의 위험신호”라고 지적했다. “어떤 자유로운 국민도 한국 대통령이 재명이 한국을 이끌고자 하는 《오웰적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오웰적 길》은 감시·통제 기반 전체주의적 체계를 뜻한다.

### “친중 이재명 정권엔 《중공청》이…”

《전체주의 비판》엔 좌파 김대중 정권 출신들도 동참. 이낙연 전 총리(전남 영광)는 《공무원 휴대전화 검열》을 우려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 전체주의. 지금 전체주의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개인의 휴대전화·컴퓨터를 들여다보는 것은 공산국가의 주민통제 수단이다.”

장성민 전 의원(전남 고흥)도 검찰청 해체·증대 범죄수사 청·공소청 신설이 강행되자 “중공식 독재, 공안 체제 포식”이라고 했다. “친중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 법치·삼권분립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검찰청이 해체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들어선다. 이를하여 《중공청》이다. 자유민주적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중공식 공산독재 유사 체계가 들어선다.”

정부가 조폭? 양아치? 《중공식 전체주의 망령》은 경제 분야에서도 논란이다. 송언석 국립 원내대표, “김용법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요 대기업을 불러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더 들어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당하게 누려야 할 환자익을 포기하라고 압박 한 것이다. 달러를 내놓으라니, 정부가 조폭이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중국도 기업들의 달러 거래를 통제했다. 전체주의 국가 중국 따라 하느냐. 미국에

### 與 지방선거용 이해훈 영입, 혐치 아닌 억지 정략

야권을 무력화하고 보수와 중도층으로 지지를 확장하기 위한 선거 전략일 것이다. 정책도, 정견도 정반대인 사람을 마구잡이로 데려다 놓는 것을 혐치로 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행위”라며 이씨를 즉각 제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견박하고 위헌 법률을 쏟아내며 폭주하고 있지만, 국힘은 20% 지지율에 머물고 있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세력과 단절하기는커녕 이들의 표를 이용해 당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상식 밖이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이해훈씨를 비난하며 “우리는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가 말하는 그 기준이라면 국힘은 ‘윤 아개인 당’이 돼야 한다.

국힘이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국민의 혐오를 받는 세력과 단절하고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당의 문을 열어 다양한 인재를 받아들여야 한다. 국힘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 당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으면 ‘이해훈 소동’ 같은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 ‘민중기 편파 수사’ 빼 통일교 특검 있을 수 없다

통일교 특검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29일 결렬됐다. 통일교 특검의 핵심 중 하나가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인데 민주당이 이를 수사 대상에 넣지 말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신 ‘신천지의 2022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교 특검 논의는 ‘통일교가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인사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민중기 특검팀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것이다. 신천지의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지난 8월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인사로부터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고, 국립 의원만 기소했다. 편파 수사를 한 것이다.

민중기 특검 측은 “(민주당 의원 문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민중기 특검이 구속

기소한 20명 중 11명이 김건희 여사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정교유착 등의 실체를 낱낱이 밝혔다”고 했다.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혐의는 숨겨주고서 이런 자화자찬을 했다.

통일교 특검법은 어떤 법안보다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 편파 수사 의혹의 핵심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에서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3000만원 미만 뇌물 수수 혐의로 공소시효는 7년이다. 특검법이 통과돼도 전 의원 관련 의혹은 규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것인지 시간만 끌고 있다. 갑자기 신천지 문제를 들고나온 것도 시간 끌기용일 것이다. 어떤 경우든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빼 통일교 특검은 있을 수 없다.

### 안하무인 쿠팡, 정치권 규제가 독점 만들어준 때문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대한 보상안으로 전 이용자에게 5만원 상당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실질적 배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용 빈도가 높은 로켓배송과 쿠팡이츠에는 각 5000원 씩 반 배정하고, 이용 빈도가 낮고 단가가 높아 추가 결제가 필수인 여행(트래블)과 명품(알렉스)에 2만원 씩을 할당한 것이다. 배상이 아니라 마케팅에 가깝다는 소비자 반발이 쏟아졌다.

쿠팡이 안하무인식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유통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독점 구조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정치권이다. 2012년 여야 합의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한 이후 정치권은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 휴식권을 내세워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뇌우고 이마트·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사의 손발만 뚫는 차별을 지속해왔다. 쿠팡이 365일, 24시간 무제한 영업을 누릴 때 대형마트는 월 2회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0~오전 10시) 제한이라는 족쇄에 묶였다. 쿠팡이 새벽 배송을 할 때도 대형 마트는 영업 금지 시간대 매장 거점 배송이 원천 봉쇄돼 경쟁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

그 결과 25% 넘던 대형 마트의 점유율은 10%대 초반으로 급락 했고, 쿠팡이나 알리 등 이커머스 점유율은 50%를 돌파해 유통 시장을 장악했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은 전국에서 100여 곳 이상 문을 닫아 규제 목적과 거주로 갔다. 대형 마트가 쉬는 날 소비자는 전통 시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쿠팡에 주문했다. 정치권 규제는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독점을 안겨주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안하무인으로 만들었다.

이 규제는 실패가 확인됐는데도 국회는 쿠팡 사태 발생 보름 전 대형 마트 영업 규제를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래 놓고선 정치권은 마치 아무 책임도 없다는 듯 쿠팡 호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쿠팡이란 ‘괴물’을 키운 공범은 규제 중독에 빠져 있는 정치권이다. 오죽하면 이마트 노조가 나서 “휴식권보다 생존권이 먼저”라며 영업 규제를 풀어 달라는 성명을 냈겠나.

프랑스와 일본 등은 10여 년 전부터 유통 규제의 패러다임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꿨지만 표 계산에만 매몰된 우리 정치권은 규제 정치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